

유럽재정위기의 원인과 정치적 성격*

한 영 빈** | 서울대학교

오늘날 유럽재정위기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PIGS 국가들의 방만한 재정정책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PIGS 국가들의 행동을 유발시킨 구조적인 요인들을 도외시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글은 PIGS 국가들의 결과론적인 행위보다는 유로존의 모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는 구조적인 시각에서 유럽재정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이 글은 위기의 원인이 주변부 국가들의 방만한 재정정책보다는 중심부 국가인 독일의 유로중상주의로의 전환 그리고 이와 함께 발생한 임금억제정책에 기인하는 바가 더 크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즉 독일의 유로중상주의 및 임금억제정책은 유로존 내 주변부 국가들에 대한 “근린공핍화”(beggar thy neighbor) 정책으로 이어지면서 이들을 재정위기로 몰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현재 유럽재정위기의 본질이 단순한 경제적 문제라기보다는 통화통합에 따라 발생한 통화영역의 문제를 노동영역에 전가시키는 가운데 유로존 주변부 국가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정치적 성격을 띤 분배의 위기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주제어: 유럽재정위기, PIGS, EMU, 독일, 단위노동비용, 유로중상주의

I. 서론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로 인해 발생한 신용경색은 실물경제까지 침체시키는 글로벌 금융위기(global financial crisis)로 발전되었었다. 당시 이 위기 속에 휘말려 들어 있었던 유럽 국가들은 파산 직전에 있던 자국의 금융기관들을 구제금융하였고 유럽경제부흥계획(European Economic Recovery Plan)을 마련하여 유럽연합(EU: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0-330-B00049). 심사를 맡아주신 익명의 심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전임연구원. e-mail: deltapavonis@paran.com

European Union) GDP의 15%에 해당하는 총 2000억 유로 상당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성공을 거두며 유럽 국가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악몽에서 벗어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낙관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이 곧 밝혀졌다. 위기 타파를 위한 많은 자금 지출은 유럽 국가들의 재정건전성 문제를 악화시키며 오늘날 유럽재정위기(European sovereign-debt crisis)를 야기하였기 때문이다.

유럽재정위기는 2009년 11월 정권을 잡은 그리스의 신임 총리 파판드레우(Papandreou)가 그리스의 재정적자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6% 수준보다 무려 2배나 많은 12% 수준임을 밝히면서 촉발되었다. 이는 그리스가 EU의 경제통화동맹(EMU: Economic and Monetary Union)에 가입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하여 유럽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EU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신뢰도를 급격히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것은 곧바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PIGS에¹⁾ 대한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PIGS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신뢰 하락이 악순환을 유발하며 EU 자체의 안정성을 위협하기 시작하자 결국 EU와 IMF는 2010년 5월 그리스에 3년간 1100억 유로를 구제금융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본격적인 유럽재정위기가 시작되게 된다. 이후 2010년 11월에는 아일랜드, 2011년 4월에는 포르투갈 그리고 2012년 6월에는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받았으며 최근 들어서는 EU와 IMF가 키프로스(Cyprus)에 구제금융하기로 결정함으로써 EU 전체가 재정위기라는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며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유럽의 재정위기를 기점으로 그동안 유로화가 성공적이라고 자화자찬하던 유럽의 분위기는 사라지게 되었다. 더 나아가 많은 전문가들이 유로존(Euro-zone)의 붕괴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유럽지역은 패닉 상태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Wonders 2010, 21).²⁾ 그렇다면 유로존의 붕괴 가능성까지 언급하게 만들고 있는 유럽재정위기의 원인은 무엇

1) PIGS는 2010년 국가부채위기에 직면한 포르투갈(Portugal), 이탈리아(Italy), 그리스(Greece), 스페인(Spain)을 지칭한다. 또한 아일랜드(Ireland)를 추가하여 PIIGS로 표기하기도 한다.

2) 유로존이 붕괴할 것이라는 주장이 과장되었다고 반박하는 반대의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Bergsten 2012, 39; Marsh 2009, 5). 이에 비해 코헨(Cohen 2012, 689)의 경우는 양자의 시각이 모두 틀렸다고 주장을 한다. 그에 의하면 유로화의 미래가 성공적일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그렇다고 붕괴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유로화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그럭저럭 힘들게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일까? 이에 대해서는 현재 크게 두 가지 시각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³⁾ 첫 번째 시각은 PIGS와 같은 EU의 주변부 국가들의 도덕적 해이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Tsoukalis 2012; Mitsopoulos and Pelagidis 2011). 이들 국가는 포퓰리즘적인 복지국가 정책에 기반하여 과대한 임금상승, 과소비, 과대한 신용대출을 일삼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막대한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를 유발하면서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위기의 본질이 주변부 국가들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재정문제에 있다는 것이기에 구조조정 및 안정성장협약(SGP: Stability and Growth Pact)과 재정원칙을 강력히 강제할 수 있는 EU의 제도 개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Wyplosz 2010). 하지만 위기의 원인을 개별국가들의 정책적 방만함으로 돌리는 이러한 시각은 그동안 수없이 많이 발생한 경제위기 때마다 매번 등장하였던 단골 원인으로써 그때마다 비판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 시각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들의 행동을 유발시킨 발생학적인 원인, 즉 구조적인 문제를 등한시한다는 점이다. 국가들의 행동이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설명되지 않는 한 위기의 원인은 현상 및 결과에만 안주하는 분석으로 전략할 수밖에 없으며 해결책 역시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게 된다.

이 글은 첫 번째 시각과 대립되며 최근 들어 많은 학자들에게서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있는 구조적인 시각에서 유럽재정위기의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⁴⁾ 구조적인 시각은 주변부 국가들의 결과론적인 행위보다는 유로존의 모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면서 어떠한 요인들이 회원국들의 행동을 유발하는가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시각에서 유럽재정위기를 분석하면서 위기의 원인이 주변부 국가들의 방만한 재정정책보다는 중심부 국가인 독일의 유로중상주의로의 전환 그리고 이와 함께 발생한 임금억제정책에 기인하는 바가 더 크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즉 독일의 유로중상주의 및 임금억압정책이 유로존 내 주변부 국가들에 대한 “근린궁핍화”(beggar thy neighbor) 정책으로 이어지면서 이들을 재정위기로 몰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현재 유럽재정위기의 본질이 단순한 경제적 문제라기보다는 통화통합에 따라 발생한 통화영역의 문제를 노동영역에 전가시키는 가운데 유로존 주변부 국

3) 유럽재정위기의 원인에 대한 보다 다양한 설명은 이승주(2011)를 참조할 것.

4) 이러한 경향은 주로 주류경제학의 시장주의 패러다임을 비판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후기)케인스주의자들 및 좌파 이론가들에게서 이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Lapavitsas et al. 2012; Huffschmid 2005; Overbeek 2012; Hein and Truger 2004; Stockhammer 2011; Overtveldt 2011; Bibow 2012).

가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정치적 성격을 띤 분배의 위기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II. EMU 구조의 내재적 모순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유럽통합과정은 그동안 많은 난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하면서 EU라는 지역공동체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내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이 조약에서 유럽만의 단일화폐인 유로화를 만들어내는 EMU의 3단계 경제통합 실천계획을 구체화하면서 추진시켰다. 이 계획은 1999년 유로화가 탄생되고 2002년 시장에 유로화가 실제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결실을 맺게 되었으며 이렇게 탄생된 유로존 모델은 오늘날 EU 경제정책의 핵심을 형성하게 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유로존 모델은 매우 치명적인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럽 국가들이 EMU를 통하여 화폐통합만을 완성하였지 실질적인 경제통합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정한 경제통합은 오늘날 EMU 회원국들이 유럽재정위기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다.

EMU가 진정한 경제통합을 이루어지내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미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EMU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국가들에게 경제수렴기준 네 가지를 제시하였고 이를 유로화가 탄생되는 시점인 1999년까지 도달하도록 하였다. 경제수렴기준 네 가지란 첫째, 물가안정으로 연간 인플레이션이 역내에서 가장 낮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3개국의 평균수준을 1.5% 이상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다. 둘째, 재정기준으로 연간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3% 이내여야 하며 정부부채는 GDP의 6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다. 셋째, 환율기준으로 평가시점까지의 2년간에 걸쳐 유럽환율조정장치(ERM: European Exchange Rate Mechanism)의 정상적인 변동 폭 내에서 안정되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마지막 조건은 금리로 장기명목금리가 역내에서 가장 안정된 물가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장기금리 수준보다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네 가지 조건은 모두 통화 및 금융적인 조건, 즉 화폐통합과 관련된 것이다. 이에 비해 경제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축, 즉 실물경제의 주요 지표인 노동, 생산, 소비, 투자 및 국제수지와 관련된 조건들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즉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경제수렴기준은 화폐통합을 위한 기준이지 실물경제를 포함하는 전체 경제통합의

기준이 아닌 것이다.

화폐통합의 수렴기준에만 치중되어 있는 EMU의 제도적 구성은 시장의 자기조정 메커니즘을 신뢰하는 주류경제학의 패러다임, 특히 통화주의적인 시장주의자들의 낙관론적인 사고방식이 크게 반영되어 있다. 통화주의자들은 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 통화가치를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따라 물가를 안정시키는 통화정책을 다른 모든 경제정책에 대해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통화가치 안정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는, 즉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one-size-fits-all) 통화주의자들의 정책(Marsh 2009, 7; Bibow 2012, 20)은 화폐통합이 상이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 EMU 회원국들의 실물경제 영역을 자연스럽게 수렴·통합시킬 것이라는 매우 낙관론적인 생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Bergsten 2012, 39; Stockhammer 2011, 84; Manolopoulos 2011, 244). 이들은 화폐통합과는 별도로 실물영역은 자유화와 탈규제만 하면 시장의 자기조정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여 상이한 실물영역들이 서로 균형점을 향하여 수렴되어 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실물경제 통합과 관련된 엄격한 수렴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것도 시장의 자기조정 메커니즘에 대한 통화주의자들의 이러한 낙관론적인 시각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통화정책을 위하여 중앙화된 기구를 운영한 것과 달리 실물영역에서의 경제정책은 개별국가 차원에 맡겨졌다는 것 역시 탈규제 및 자유화된 시장에서의 이러한 자연적인 수렴효과를 강하게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EMU의 제도적 특성에 깔려있는 통화주의적인 시장주의자들의 사고방식에는 몇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이들은 화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통화영역과 실물영역을 분리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Behren and Steiger 1982, 148). 통화주의적인 시장주의자들은 화폐를 양적인 수단, 즉 시장에서 형성된 (교환)가치 관계를 계산의 편리함을 위하여 양적으로 반복하는 보조적인 회계수단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⁵⁾

5) 화폐를 양적인 수단으로만 간주하는 전통은 아담 스미스까지 올라갈 정도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흔히 주류경제학 패러다임에서 보이는 이러한 전통에 대하여 후기케인스주의자들과 후기마르크스주의자들은 강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주류경제학 패러다임이 화폐를 양적인 보조수단으로만 이해한 결과 시장모델을 화폐가 없는 자연경제모델로 환원시켜 이론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자연경제모델은 실물변수들로만 구성이 되고 있으며 이들 간의 상호작용만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모델은 금융이 지배하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경제, 특히 금융위기와 같은 현상을 올바르게 분석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하고 있다. 후기케인스주의자들과 후기마르크스주의자들이 주류경제학 패러다임의 화폐에 대해 제기하고 있는 이론적 논쟁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한영빈(2008)을 참조할 것.

화폐에 대한 통화주의자들의 이러한 이해는 이들로 하여금 화폐수량설(quantity theory of money)이란 이론적 전통을 형성시키게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통화영역과 실물영역을 분리시켜 바라보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화폐수량설은 통화량의 변동이 일시적으로 생산과 같은 실물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고 물가변동만을 초래한다고 보는 이론인데 화폐가 실물영역에 장기적으로 중립적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통화영역과 실물영역을 분리시키고 있다. 하지만 많은 비판자들은 화폐가 시장에서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관계 자체를 형성하고 이끌어 나가는 주체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화폐를 사회구성체 수단(means of social construct)으로까지 인식하고 있으며 화폐수량설과는 정반대인 '금융생산이론'(theory of monetary production)을 주장하고 있다(Deutschman 1996; Keynes 1933). 이 이론에 의하면 화폐는 통화주의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생산, 노동 및 투자 등의 규모 및 가격을 결정하는 속성이 있다. 이로 말미암아 화폐는 실물경제 영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실물영역 자체를 금융영역에 종속시키며 지배해나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금융생산이론에서는 통화영역과 실물영역이 상호불가분의 관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시각에서 이들은 양자를 분리시키는 통화주의자들의 화폐수량설을 가지고는 시장을 올바르게 분석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둘째, 통화주의자들은 시장의 자기조정 메커니즘을 순기능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낙관론의 오류에 빠지고 있다. 이는 통화주의자들이 통화영역과 실물영역을 분리시킨 결과 화폐가 실업 및 경기침체 등을 통하여 시장의 불균형 및 불안정을 끊임없이 야기하는 파괴적인 과정을 무시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통화가치 안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EMU의 통화정책은 필연적으로 디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디플레이션은 기업수익의 악화, 투자 감소 및 실업증가를 유발하며 실물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통화주의자들도 이러한 점은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통화주의자들은 이러한 부작용은 일시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왜냐하면 화폐가 단기적으로는 실물영역에 영향을 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커다란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화주의자들은 실물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일시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인내하면서 치러야 할 당연한 대가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고통을 감수한다면 장기적으로 실물영역에서 시장의 자기조정 메커니즘이 작용하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화폐가 실물영역에 단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비중립적이라는 금융생산이론의 시각에서 본다면 EMU의 디플레이션 유발 정책은 시장의 자기조정 메커니즘이란 것이 순

기능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자기 파괴적인 모습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장기적인 기업수익의 악화는 투자 감소뿐만 아니라 기업파산, 신용경색 및 실업증가 등을 악순환적으로 증가시켜 경제위기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셋째, 시장의 자기조정 메커니즘을 믿는 통화주의적인 시장주의자들의 낙관론은 노동의 본질적 속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도 바탕을 두고 있다. 통화주의자들은 임금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가정하면서 시장의 자기조정 메커니즘을 통한 자연스런 경제통합을 기대하고 있다. 즉 물가안정에만 치중을 하면 실물영역에서 노동의 가격인 임금은 유연하기 때문에 시장에 탄력적으로 반응을 할 것이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완전고용과 경상수지 균형으로 이끌어 특별한 문제없이 경제가 통합되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케인스(Keynes 1973)가 지적하였듯이 임금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⁶⁾ 노동이란 본래 사회조직 안에 묻어 들어가 있는 것(embedded)으로써 자연환경과 사회규범에 영향을 받기에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에 종속되어 상품으로써 판매될 수 없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이다(Polanyi 2009, 242-3). 사회조직 안에 묻어 들어가 있는 인간의 노동이 자연환경 및 사회규범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이 시장의 원칙에 따라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조직 내에서의 자신의 지위, 안전 및 명예 등과 같은 것을 위하여 노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럴 경우 노동의 가격인 임금 그리고 복잡한 사회적 제도로 존재하는 노동시장의 본질적 특성은 탄력적이고 유연한 것이 아니라 역으로 비탄력적이고 경직적인 것이 된다. 임금과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않다면 시장의 자기조정 메커니즘은 작동할 수 없으며 EMU의 디플레이션 유발 정책으로 인하여 실업이 속출한다면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지위, 안전 및 명예가 불안정하다고 느끼고 이에 저항하는 특성마저 보이게 된다. 통화주의적인 시장주의자들은 오늘날 임금이 유연하지 못한 이유가 시장 메커니즘을 반대하며 저항하는 무지한 세력들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폴라니(Polanyi 2009, 94)의 주장처럼 시장의 자기조정 메커니즘이 유토피아적인 발상에 불과한 것이고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저항적 성향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6) 케인스는 노동시장에서 노동공급곡선이 실질임금 함수가 아니라 화폐임금 함수임을 강조하였다. 노동자는 실질임금을 규정할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실질임금에 따라 행동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오로지 화폐임금에 따라 행동하는 노동자의 공급곡선은 비신축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비신축적인 노동가격은 균형을 방해하며 노동시장에서는 불균형 및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하게 된다.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고려한다면 통화주의자들의 낙관론적인 시각처럼 EMU가 시장의 자기조정 메커니즘을 통하여 자연스런 경제통합으로 연착륙되는 경로를 걷기보다는 갈등과 위기를 수반하는 자기 파괴적인 경로를 걷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현재 EMU가 추구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은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화시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낮은 인플레이션 정책은 노동, 생산 및 투자와 같은 실물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실업 증대 및 경기침체를 유발하게 만든다. 이것은 낮은 인플레이션 유지를 위한 통화영역의 비용이 실물영역에 전가되어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이때 실물영역으로 전가되는 통화비용은 일반적으로 임금조정을 통하여 해결되게 된다. 그런데 EMU 구조 내에서의 임금 조정은 회원국들 간의 파국적인 임금경쟁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환율제거와 엄격한 재정정책이란 조건 속에서 EMU 회원국들이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은 다른 회원국들보다 더 낮은 임금상승률을 확보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임금상승 억제를 향한 자기 파괴적인 경쟁은 궁극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낳게 되며 승자는 향상된 시장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을 증가시키고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면서 성장하게 된다. 반면 패자는 시장경쟁력이 하락함에 따라 수출이 둔화되며 경상수지 적자의 문제에 허덕이게 된다. 패자에게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신용창출에 기반을 둔 국내총수요의 증대밖에 없으며 이것은 결국 이들 국가가 부채 증가 및 버블을 양산하여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통화비용의 전가는 근린공핍화 정책으로 이어지는 임금의 바닥으로의 경쟁을 통하여 EMU 내의 회원국들을 승자인 중심부 국가들과 패자인 주변부 국가들로 고착화시키며 EU 내에서 전자의 후자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II. 유럽재정위기의 원인: 파국적인 임금경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하여 거의 모든 국가들이 경기침체에 빠져들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타 국가들과 비교하여 유로지역이 위기를 야기할 정도로 불안정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표 1>에서 나타나듯이 유로지역은 경제성장률과 경상수지 부문에서 압도적인 수치를 보이는 중국을 제외한다면 양호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상수지의 경우 유로지역은 전반적으로 약간의 흑자를 유지할 만큼

〈표 1〉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제성장률·경상수지(GDP %)

지역 및 국가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미국	경제성장률	3.1	2.7	1.9	-0.3	-3.1	2.4	1.8	2.2
	경상수지	-5.9	-6.0	-5.1	-4.7	-2.7	-3.0	-3.1	-3.0
EURO 지역	경제성장률	1.7	3.2	3.0	0.4	-4.4	2.0	1.4	-0.6
	경상수지	0.5	0.5	0.4	-0.7	0.2	0.5	0.6	1.8
일본	경제성장률	1.3	1.7	2.2	-1.0	-5.5	4.7	-0.6	2.0
	경상수지	3.6	3.9	4.9	3.3	2.9	3.7	2.0	1.0
영국	경제성장률	2.8	2.6	3.6	-1.0	-4.0	1.8	0.9	0.2
	경상수지	-2.1	-2.9	-2.3	-1.0	-1.3	-2.5	-1.3	-3.5
중국	경제성장률	11.3	12.7	14.2	9.6	9.2	10.4	9.3	7.8
	경상수지	5.9	8.5	10.1	9.3	4.9	4.0	2.8	2.6

출처: IMF(2013, 150-169)

〈표 2〉 세계 주요 국가들의 재정적자·국가부채(GDP %)

지역 및 국가		1997~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미국	재정적자	-2.0	-2.8	-5.1	-8.1	-8.5	-7.7	-6.4
	국가부채	62.2	66.5	75.5	89.1	98.2	102.5	106.5
EURO 지역	재정적자	-2.5	-2.4	-3.0	-4.4	-4.4	-3.4	-2.0
	국가부채	70.1	66.5	70.3	80.0	85.6	88.1	92.9
일본	재정적자	-6.0	-2.2	-3.5	-7.5	-7.9	-8.5	-9.3
	국가부채	153.6	183.0	191.8	210.2	216.0	230.3	237.9
영국	재정적자	-2.1	-5.2	-7.3	-9.7	-8.6	-6.5	-5.4
	국가부채	41.9	43.7	52.2	68.1	79.4	85.4	90.3

출처: IMF(2013, 161)

심각한 경기침체에 놓여 있지는 않았다. 재정적자와 관련하여서도 〈표 2〉를 보면 유로지역보다 미국, 일본 및 영국 등이 더 심각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외형적으로만 본다면 유로지역은 미국, 일본 및 영국 등과 같은 나라에 비해 상대적인 안정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위기 발생의 징후는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이러한 외형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유로지역은 내부적으로 볼 때 회원국들 간

의 심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경상수지 부문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3>을 보면 2000년대 초반부터 EMU 회원국들 사이에서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와 적자를 보이는 국가들이 구분되어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자에 속하는 핵심 국가들로는 독일, 네덜란드 및 오스트리아 등이 눈에 띄며 후자에 속하는 국가들로는 이태리,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및 아일랜드 등이 두드러진다. 2002년 유로화가 세계시장에서 유통되면서 구조화되기 시작한 EMU 내 경상수지 불균형은 환율변경을 통한 적자해소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겪는 국가들을 힘겹게 만들어 왔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2000년대 이후 이렇게 고착화된 유로지역 내 경상수지 불균형 현상이 현재 유럽재정위기의 근본적인 배경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Bibow 2012, 11; Perez-Caldenty and Vernengo 2012, 3). 이들은 경상수지 불균형이 EMU 국가들을 흑자를 보이는 중심부와 적자를 보이는 주변부로 재편성하게 만들었고 전자는 수출중심주의적인 성장전략으로 나아가게 만든 반면 후자는 신용중심의 성장전략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⁷⁾ 그리고 이러한 결과 주변부 국가들에서 부채증가 및 버블이 형성됨으로써 오늘날의 유럽재정위기를 발생시켰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EMU 내 경상수지 불균형의 원인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경상수지 불균형이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국가경쟁력의 상실과 국내수요 성장률이라는 두 가지 요인과 상관이 있으며 전자는 다시 (1) 생산성 증가율 대비 임금 상승률과 (2) 환율에 의해 좌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Bibow 2012, 13). EMU의 경우 환율이 제거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상적인 상황에서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통한 경쟁력 확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가경쟁력과 관련하여 볼 때 오로지 첫 번째 요인만이 EMU 회원국들에게 결정적인 것이 된다. 생산성 증가율 대비 임금 상승률이란 단위노동비용(unit of labor cost)⁸⁾의 문제를 의미하

7)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세계적인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 현상이 지역적인 차원에서 재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세계경제는 수출중심주의적인 전략을 통하여 경상수지 흑자를 누리는 중국과 경상수지 적자를 메꾸기 위하여 신용중심주의적인 전략으로 나가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작동되고 있는데 유럽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불균형 문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한영빈(2012)을 참조할 것.

8) 단위노동비용이란 한 단위의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명목노동비용을 말한다. 즉 노동투입 한 단위당 비용을 노동생산성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동생산성의 증가는 단위노동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만일 노동생산성증가율이 노동비용증가율과 동일하다면 단위노동비용은 변동이 없게 됨으로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고 물가상승에도 영향을 미치지

〈표 3〉 유로존 주요 국가들의 경제지표(단위: GDP %)

국가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EURO 지역	경제성장률	0.7	2.2	1.7	3.2	3.0	0.4	-4.4	2.0	1.4	-0.6
	경상수지	-	-	0.5	0.5	0.4	-0.7	0.2	0.5	0.6	1.8
	재정적자	-3.1	-2.9	-2.5	-1.3	-0.7	-2.1	-6.4	-6.2	-4.2	-3.7
	국가부채	62.0	62.4	62.8	61.6	59.0	62.3	74.6	80.0	82.5	85.3
독일	경제성장률	-0.4	1.2	0.7	3.7	3.3	1.1	-5.1	4.2	3.0	0.7
	경상수지	-	-	5.1	6.3	7.4	6.2	6.0	6.2	6.2	7.0
	재정적자	-4.2	-3.8	-3.3	-1.6	0.2	-0.1	-3.1	-4.1	-0.8	0.2
	국가부채	64.4	66.2	68.5	68.0	65.2	66.8	74.5	82.4	80.4	81.9
프랑스	경제성장률	0.9	2.5	1.8	2.5	2.3	-0.1	-3.1	1.7	2.0	0.0
	경상수지	-	-	-0.5	-0.6	-1.0	-1.7	-1.3	-1.6	-1.9	-2.4
	재정적자	-4.1	-3.6	-2.9	-2.3	-2.7	-3.3	-7.5	-7.1	-5.3	-4.8
	국가부채	62.9	64.9	66.4	63.7	64.2	68.2	79.2	82.4	85.8	90.2
네덜란드	경제성장률	0.3	2.2	2.0	3.4	3.9	1.8	-3.7	1.6	1.0	-1.0
	경상수지	-	-	7.4	9.3	6.7	4.3	5.2	7.7	9.7	8.3
	재정적자	-3.1	-1.7	-0.3	0.5	0.2	0.5	-5.6	-5.1	-4.5	-4.1
	국가부채	52.0	52.4	51.8	47.4	45.3	58.5	60.8	63.1	65.5	71.2
오스트리아	경제성장률	0.9	2.6	2.4	3.7	3.7	1.4	-3.8	2.1	2.7	0.8
	경상수지	-	-	2.2	2.8	3.5	4.9	2.7	3.4	0.6	2.0
	재정적자	-1.5	-4.4	-1.7	-1.5	-0.9	-0.9	-4.1	-4.5	-2.5	-2.5
	국가부채	65.3	64.7	64.2	62.3	60.2	63.8	69.2	72.0	72.5	73.4
이탈리	경제성장률	0.0	1.7	0.9	2.2	1.7	-1.2	-5.5	1.7	0.4	-2.4
	경상수지	-	-	-0.9	-1.5	-1.3	-2.9	-2.0	-3.5	-3.1	-0.5
	재정적자	-3.6	3.5	4.4	-3.4	-1.6	-2.7	-5.5	-4.5	-3.8	-3.0
	국가부채	104.1	103.7	105.7	106.3	103.3	106.1	116.4	119.3	120.8	127.0
스페인	경제성장률	3.1	3.3	3.6	4.1	3.5	0.9	-3.7	-0.3	0.4	-1.4
	경상수지	-	-	-7.4	-9.0	-10.0	-9.6	-4.8	-4.5	-3.7	-1.1
	재정적자	-0.3	-0.1	1.3	2.4	1.9	-4.5	-11.2	-9.7	-9.4	-10.6
	국가부채	48.8	46.3	43.2	39.7	36.3	40.2	53.9	61.5	69.3	84.2

지 않게 된다(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 2000년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까
 지 독일에서 나타난 단위노동비용 상승률 둔화 현상은 노동생산성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 아
 니다. 독일의 경쟁력 확보는 기술의 진보 및 혁신에 이은 노동생산성 증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임금)노동비용 상승을 억제한 데 기인한다는 특징이 있다(Lapavitsas et al. 2012, 2).

〈표 3〉 계속

국가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그리스	경제성장률	5.9	4.4	2.3	5.5	3.5	-0.2	-3.1	-4.9	-7.1	-6.4
	경상수지	-	-	-7.6	-11.4	-14.6	-14.9	-11.2	-10.1	-9.9	-2.9
	재정적자	-5.6	-7.5	-5.2	-5.7	-6.5	-9.8	-15.6	-10.7	-9.5	-10.0
	국가부채	97.4	98.6	100.0	106.1	107.4	112.9	129.7	148.3	170.3	156.9
포르투갈	경제성장률	-0.9	1.6	0.8	1.4	2.4	0.0	-2.9	1.9	-1.6	-3.2
	경상수지	-	-	-10.3	-10.7	-10.1	-12.6	-10.9	-10.6	-7.0	-1.5
	재정적자	-3.7	-4.0	-6.5	-4.6	-3.1	-3.6	-10.2	-9.8	-4.4	-6.4
	국가부채	59.4	61.9	67.7	69.4	68.4	71.7	83.7	94.0	108.3	123.6
아일랜드	경제성장률	3.9	4.4	5.9	5.4	5.4	-2.1	-5.5	-0.8	1.4	0.9
	경상수지	-	-	-3.5	-3.5	-5.4	-5.7	-2.3	1.1	1.1	4.9
	재정적자	0.4	1.4	1.7	2.9	0.1	-7.4	-13.9	-30.8	-13.4	-7.6
	국가부채	30.7	29.5	27.3	24.6	25.1	44.5	64.8	92.1	106.4	117.6

출처: 유로스탯(Eurostat 2013) 각각의 주제별 통계에서 추출.

는 것이다. 만일 단위노동비용이 안정적이라면, 즉 임금과 생산성이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면 임금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따라서 EMU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단위노동비용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통화비용이 전가되는 실물경제 영역이 경쟁력을 상실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EMU에 이러한 공동의 임금정책이 없다는 데 있다. 즉 EMU는 통화비용이 전가되는 실물경제 부문, 특히 노동과 관련된 임금정책을 EU 차원이 아닌 개별국가 차원에 맡기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럴 경우 EMU에 가해지는 외부 충격에서 경쟁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하여 회원국들 간의 단위노동비용에 대한 바닥으로의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표 4〉는 EMU 회원국들의 단위노동비용에 대한 바닥으로의 경쟁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표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EMU 회원국들 가운데 중심부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주변부 국가들에 비해 단위노동비용의 상승률을 낮게 유지하여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중심부 국가들 중에서도 독일의 단위노동비용 상승률은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게 유지되어 왔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바닥으로 경쟁의 승자는 중심부 국가들이며 그 중에서도 최대의 승자는 독일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로 대표되는 중심부 국가들의 승리는 경쟁력 확보, 수출 증가 및 경상수지 흑자로 이

〈표 4〉 유로존 주요 국가들의 단위노동비용 및 생산성 증가율(전년도 대비 %)

연도/ 국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이태리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2000	0.1	1.8	3.1	-0.1	-0.5	2.7	1.4	4.5	9.4
2001	-0.0	2.3	4.6	9.5	2.9	2.9	0.0	3.4	5.1
2002	0.2	2.9	4.4	0.2	3.4	2.9	9.1	3.0	1.9
2003	0.7	2.1	2.2	1.1	4.3	3.1	1.1	3.5	6.0
2004	-0.8	0.7	0.3	-0.8	1.4	2.6	1.2	0.8	4.1
2005	-1.0	1.9	-0.3	0.4	2.6	3.5	3.5	3.6	5.5
2006	-2.4	1.7	0.7	0.6	1.5	3.1	-0.3	0.6	3.8
2007	-1.5	1.4	1.5	0.6	1.8	3.8	2.3	0.8	3.4
2008	2.0	2.8	2.3	3.0	3.8	5.5	-0.4	3.0	4.8
2009	6.7	3.5	4.9	5.2	4.3	1.1	10.6	2.4	-6.6
2010	-1.9	0.7	-0.8	-0.6	-0.4	-1.8	0.7	-1.3	-6.8
2011	1.2	1.4	1.0	0.7	0.6	-1.9	-2.8	-0.9	-2.9
2012	2.7	-	1.7	3.5	-	-	-6.3	-4.5	1.5
생산성 증가율(2000-2007년) 평균									
	1.7	1.6	1.6	1.9	0.5	0.6	3.5	1.6	2.9

출처: OECD(2013) 단위노동비용과 생산성 증가율 통계에서 추출.

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주변부 국가들은 경쟁력 상실, 수출 둔화 및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EU 차원의 공동임금정책의 부재에 따른 단위노동비용의 바닥으로의 경쟁은 승자와 패자가 유발하면서 EMU 회원국들을 중심부와 주변부로 구분하는 경상수지 불균형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편 경쟁력을 상실한 주변부 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게 된다. 환율이 제거되었기에 평가절하가 불가능하고 수출경쟁력마저 상실된 상황에서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내수요를 창출시키는 방법밖에 남아 있지 않게 된다(Perez-Caldentey and Vernengo 2012, 20). 이러한 상황에서 주변부 국가들은 이를 낮은 이자율 정책과 금융부문에 대한 탈규제와 개방을 통하여 해결하였다. 금융시장의 탈규제와 개방은 주변부로 하여금 신용창출을 통한 자금 마련을 보다 수월하게 하였고 그 결과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많은 자금이 유입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마련된 자금은 주변부 국가들에서 생산보다는 부동산과 복지과 같은 비생산적인 소비수요에서의 버블을 형성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더욱이 이를 위한 비용이 신용창출을 통하여 조달되었기 때문에 〈표 4〉에서 보듯이

주변부 국가들의 부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까지 중심부에 비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터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는 주변부 국가들을 어렵게 만들며 재정위기로 이어지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유럽의 재정위기는 주변부 국가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였다.

IV. 유럽재정위기의 정치적 성격

유럽재정위기는 통화비용이 노동영역에 전가되면서 나타난 단위노동비용의 바닥으로의 경쟁이 초래한 결과였다. 그런데 이러한 경쟁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EMU 회원국들의 이기적인 자국중심주의가 자리잡고 있다. 단위노동비용 문제는 EU 차원의 공동임금정책만 존재하였다면 바닥으로의 경쟁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공동임금정책은 노동영역으로 전가된 통화비용의 고통을 EMU 회원국들이 동일하게 공유하면서 통화정책과 같이 외부 충격에 공동으로 행동하게 만들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외부 충격에 대한 비용이 커서 EMU 전체 단위노동비용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훼손되었을지는 몰라도 공동임금정책의 존재는 회원국들을 바닥으로의 경쟁 및 경상수지 불균형으로 이끌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임금정책이 개별국가에 맡겨져 있었던 EMU의 현실에서 볼 때 이러한 시나리오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공동임금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중앙화된 유럽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바닥으로의 경쟁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유럽공동체 정신에 입각하여 회원국들에 대한 상호배려, 즉 긴밀한 정치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유럽재정위기 발생과정을 볼 때 상대방을 배려하는 협력보다는 이기적인 자국중심주의가 지배적이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특히 EU를 주도하고 있는 독일에서 뚜렷하게 발견되고 있다.

독일이 자국중심주의적인 정책을 추구하게 된 이유는 1990년 통일 이후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약 10년 동안 자신들이 경험한 최악의 경제성과와 관련이 있다. 이 시기 동안 독일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이는 국가군에 속해 있었고 실업률 역시 8~10%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어려움을 겪었다(〈표 5〉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1999년 유로화가 탄생되자 통화통합에 따른 비용증가로 말미암아 독일은 더욱 큰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이중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결국 독일은 통일 이후 지

〈표 5〉 독일의 주요 경제지표(단위: %)

독일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경제성장률	-0.8	2.6	1.8	0.9	1.8	2.0	2.0	3.2
실업률	7.7	8.5	8.0	8.7	9.4	9.1	8.3	7.5
경상수지	-0.9	-1.4	-1.1	-0.5	-0.4	-0.7	-1.3	-1.8
재정적자	-3.0	-2.2	-9.4	-3.3	-2.7	-2.3	-1.6	1.1
독일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경제성장률	1.2	0.0	-0.2	1.2	0.7	3.1	2.4	1.2
실업률	7.6	8.4	9.3	9.8	10.6	9.8	8.4	7.3
경상수지	-0.0	1.9	1.9	4.5	4.9	6.1	7.4	6.1
재정적자	-3.0	-3.8	-4.1	-3.7	-3.3	-1.6	0.2	0.0

출처: OECD(2013) 각각의 주제별 통계에서 추출.

속시근 국내수요증가 정책을 버리고 엄격한 임금 및 재정정책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전략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Cesaratto and Stirati 2010, 58). 이 정책은 1998년 정권을 장악한 사민당의 슈뢰더(Schröder) 총리가 ‘신중도’(Die Neue Mitte) 노선을 추구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2003년에 ‘Agenda 2010’이라는 이름하에 구체적인 개혁 정책으로 제시되었고 2005년에는 ‘Hartz IV’ 개혁 법안을 통하여 완성되게 된다.

‘Hartz IV’로 대표되는 독일 개혁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전략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침체된 독일경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추진된 것으로 그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 될 수 있다(Jacobi and Kluge 2007, 50). 첫째,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전략으로 대표적인 사례로는 공공고용알선기관의 조직개선 및 준시장(quasi-market) 도입 등을 통하여 노동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하려는 개혁을 들 수 있다. 둘째, 실업자들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전략으로 대표적인 것은 실업급여 기간 단축 및 임금보조금을 통한 노동시장 참여 유도 등과 같은 개혁 사례이다. 셋째, 노동시장 탈규제 전략으로 고용보장 조건 완화 및 비정규직 증가 허용 등이 대표적인 개혁 내용이었다. 2003~2005년 사이 슈뢰더 정부에 의하여 추진된 이와 같은 강도 높은 노동시장 개혁은 단위노동비용의 상승률을 EMU 회원국들에 비해 크게 둔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데 성공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독일은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자국의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독일의 경쟁력 확보는 경제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성격을 띤

것이였다. <표 4>를 보면 독일은 2000년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까지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을 타 회원국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유지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낮은 독일의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은 생산성 증가와 같은 경제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기간 동안 독일의 생산성 증가는 평균 1.7%로 다른 회원국들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기간 동안 독일이 평균 -0.58% 수치를 보이면서 실질임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 수치가 EU가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율 2%를 크게 밑돌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독일의 낮은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이 생산성 증가에 따른 것이 아니라 노동개혁을 통하여 실질임금을 억제하는 정책에 기인하는 바가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Özlem 2010, 8). 동시에 독일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임금억제정책을 추진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단위노동비용의 안정성을 크게 밑도는 불필요한 독일의 임금억제정책은 회원국들을 어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이기적인 행동이였다. 독일의 강력한 임금 디플레이션 정책은 주변부 국가들에게 임금경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 규모를 더욱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Lapavitsas et al. 2012, 4).⁹⁾ 더욱이 실질임금의 감소로 인하여 독일 노동자집단의 구매력 감소는 국내수요 위축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는 주변부 국가들의 수출을 악화시키는 결과도 가져오게 만들었다. 따라서 독일의 임금억제 정책은 EMU 회원국들이 처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고 자국이 처한 경제적인 위기 국면만을 고려하였던 자국중심주의적인 정책이였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파괴적인 임금억제정책은 독일 사민당이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왔던 유럽 차원의 사회적 연대(social solidarity) 추구 노선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민당은 전통적으로 시장주의 확산에 따른 폐단으로부터 노동자 및 사회를 보호하려는 사회적 연대 노선을 매우 중요시하여 왔었다. 따라서 시장주의를 확산시키는 슈뢰더의 '신중도' 노선은 사민당 내에서 격렬한 저항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이 싸움에서 반대편에 서 있었던 사민당의 정신적 지주 라퐁텐(Oskar Lafontaine)이 1999년 사임하자 슈뢰더 노선이 탄력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결국 유럽의 보호주의적인 힘이 종말을 고하고 '유로중상주의'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였다(Overbeek 2012, 35). '유로중상주의' 물결 속에서 기업 및 자산 소유자들의 연대는 강화될 수 있었겠지만 노동자들의 연대는 'Hart IV' 개혁을 통하여 붕

9) 이미 실질임금과 복지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EMU에 가입한 주변부 국가들은 바닥으로의 임금경쟁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득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다.

괴될 수밖에 없었다. 노동영역에서의 연대 붕괴로 인하여 독일 내의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유럽의 노동자들도 경쟁으로 내몰리게 되었으며 이것은 결국 단위노동비용의 바닥으로의 경쟁으로 귀결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유럽재정위기는 독일 내 정치적 노선의 변화와 함께 유럽 차원의 연대정치가 붕괴된 측면과 매우 큰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유럽재정위기가 독일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의 논리도 존재한다(Sinn 2010; Young and Semmler 2011). 영과 세믈러(Young and Semmler 2011, 18)의 경우 독일의 노동시장 압박, Agenda 2010 개혁 그리고 낮은 임금율 상승 등이 국내소비증가를 둔화시켰다는 점은 인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완만한 임금증가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수출을 증가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고 있다. 이들은 독일의 수출이 증대된 이유는 동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의 빠른 성장에 기인한 것이지 주변부 국가들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독일의 수출 비중 가운데 주변부 국가의 몫은 그리 크지 않기에 EMU 내의 경상수지 불균형은 독일의 수출 증대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독일의 임금 디플레이션 정책이 국내수요를 쇠퇴시켰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독일의 국내수요 쇠퇴는 주변부 국가들로 하여금 수출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이다. 더욱이 독일의 유로존 수출 비중이 2009년 50% 정도에 이를 정도로 크다는 주장이 있음을 볼 때 이들의 논리는 독일의 책임론을 완전하게 반박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할 수 있다 (Rosenthal 2012).

V. 유로화의 미래: 결론을 대신하여

구조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EMU의 유로존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전망은 이미 많은 경제학자들이 언급한 '최적통화지역이론'(OCA: Theory of Optimum Currency Area)¹⁰⁾에 의해 제기되었었다. 이 이론에 의하면 하나의 통화가 한 지역에서 적합한 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생산요소의 이동성, 교역의존도 및 거시경제 충격의 대칭성을 충

10) OCA이론은 먼델(Mundell 1961)에 의해 처음 제시된 후 매킨논(McKinnon 1963)과 케넨(Kenen 1969)에 의해 발전된 이론이다.

족시켜야만 한다. 즉 일반적으로 생산요소의 이동성이 클수록, 국가 간 교역의존도가 클수록 그리고 대칭적인 경기 사이클을 가질수록 통화동맹을 이루기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유로화는 노동 이동성이 완전하지 않고 대칭적인 경기 사이클을 갖고 있지도 못하기 때문에 최적통화로 적합하지 않으며 EMU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던 것이다(Wonders 2010, 25).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국가들이 유로화를 탄생시켰다는 것은 화폐통합이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프로젝트였다는 것을 의미한다(Overtveldt 2011, 3; Eichengreen and Frieden 1994). 또한 정치적 프로젝트로 탄생한 EMU의 유로존은 통화주의자들의 시각처럼 시장의 자기조정 메커니즘에 의해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들 간의 긴밀한 정치적 협력이 있을 때만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여 주고 있다.

EMU 회원국들 간의 정치적 협력 중에서도 독일의 정치적 협력은 특별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독일은 자국의 강력한 통화 및 경제적 힘을 바탕으로 사실상 유로존을 지배하며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유로존이 독일의 협력 없이 작동되기 어렵다는 교훈은 이미 1992년 ERM 위기를 통하여 나타났었다. 유로화 도입을 위하여 유럽통화제도(EMS)의 일환으로 운영되었던 ERM은 스네이크 시스템(snake system)을 이어받아 역내에서는 고정환율제 그리고 역외 국가에 대해서는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며 유럽통화의 안정성을 도모하던 환율조정장치였다. 독일의 통화였던 마르크(DM)가 역내에서 기축통화 기능을 하고 있었던 관계로 환율안정을 위한 ERM은 회원국들로 하여금 독일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ERM 구조는 회원국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었다. 회원국들은 자국 통화가 약화되는 것을 꺼려하였던 관계로 평가절하라는 환율재조정 방식 대신 독일의 인플레이션 수준으로 자국의 거시경제 수준을 조정하는 방법을 선호하였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디플레이션을 유발하며 회원국들의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1992년 독일이 통일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을 해결하려고 이자율을 올리면서 긴축정책으로 돌아서자 ERM은 작동을 멈추고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회원국들의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의 고이자율 정책은 회원국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고평가되어 있었던 회원국들의 통화에 대한 투기가 일어났고 이후 이를 견디지 못한 영국과 이탈리아가 ERM에서 탈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ERM은 큰 위기를 겪게 되었다. ERM 위기는 결국 독일이 이자율을 인하함으로써 해결이 되는데 이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교훈은 독일이 유럽차원의 ERM 안정보다 국내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우선시할 경우 회원국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ERM은 작동되지 않고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Warner 2012).

지금까지 살펴본 유럽재정위기의 발생과정은 ERM 위기가 보여준 교훈을 다시 한 번 상기 시키게 만들고 있다. 유럽재정위기의 발생은 PIIGS와 같은 주변부 국가들의 방만한 정책 운영보다는 주어진 EMU의 제도적 결합 속에서 독일이 유럽보호주의적인 정책적인 노선을 버리고 유로중상주의라는 자국중심주의적인 정책으로 전환한 데 기인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독일은 자국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시장 개혁을 통하여 임금의 바닥으로의 경쟁을 유발시켰다. 이미 실질임금이 중심부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유로존에 가입한 주변부국가들이 임금경쟁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경쟁력 이득 규모는 클 수가 없었다. 더욱이 독일의 과도한 임금억제는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감소시켜 국내수요를 쇠퇴시키면서 주변부 국가들의 수출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독일은 임금의 바닥으로의 경쟁을 통하여 주변부 국가들을 궁핍화시키면서 자국의 경제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근린궁핍화’ 정책을 통하여 독일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함으로써 성장궤도에 돌입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주변부 국가들로 하여금 경상수지 적자 및 부채 증가를 가져오면서 유럽이 재정위기에 빠져들게 하는 배경이 되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독일은 유로화의 안정을 위하여 자신들이 주도하여 만들어낸 안정성장협약이란 재정 원칙마저 지키지 않았다. 2002~2004년까지 재정적자를 운영함으로써 독일은 재정적자가 GDP의 3%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가장 먼저 깨뜨린 국가였는데도 그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다(Rosenthal 2012). 오히려 그리스를 제외한다면 PIGS 국가들은 60~80% 사이를 유지함으로써 재정원칙을 더 잘 지키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위계적인 통화관계를 가지고 시작된 화폐통합은 EMU 회원국들이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독일을 중심으로 자국의 거시경제를 조정해 나아가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특성은 약한 통화를 가지고 EMU에 참여한 국가들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통화안정을 위하여 독일에 보조를 맞춘다는 것은 약한 통화를 가진 국가로 갈수록 거시경제 조정의 규모와 대가가 훨씬 더 크게 비례하여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화동맹이 제대로 작동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상위에 있는 독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하지만 ERM 위기와 유럽재정위기에서 반복되고 있는 독일의 자국중심주의적인 정책은 EU를 이끌어가는 독일의 리더십에 회의를 갖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유럽재정위기의 책임을 주변부 국가들에게로 돌리고 구제 금융은 이들의 잘못을 독일 국민이 뒤집어쓰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팽배해 있는 현재의 독일 내 분위기는 유로화의 미래를 더욱 더 회의적으로 만들고 있다. 만일 독일이 자국 내 형성된 여론을 발판으로 자국중심주의적인 정책을 지속시킨다면 많은 회의론자들처럼 유로화의 미래는 없게 된다. 하지만 ERM 위기가 궁극

적으로는 독일의 협력으로 타개되었듯이 유럽재정위기도 독일이 자국중심주의적인 색채를 버리고 유럽차원의 협력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기에 유로화의 붕괴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은 선부른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투고일 2013년 4월 22일

심사일 2013년 5월 9일

게재확정일 2013년 5월 29일

참고문헌

- 이승주. 2011. “그리스 재정위기와 유로의 정치경제: 유로 12년, 성공 신화에서 위기로?” 『국제정치논총』 51집 3호, 235-256.
-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생산성본부 통계용어사전』. http://www.kpc.or.kr/apo/state_word.asp?c_menu=3_2&s_menu=3_2_7 (검색일: 2013. 04. 15).
- 한영빈. 2012.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 II의 특징과 메커니즘: 화폐·제도·정치적 특성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15권 1호, 301-328.
- 한영빈. 2008. “마르크스와 케인스 화폐론의 이론적 접맥 가능성: 일반균형이론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16집 1호, 23-45.
- Behrens, Rolf and Otto Steiger. 1982. “Keynesianische Fundamentalisten und die Krise der herrschenden Keynes – Interpretation.” In *Argument Sonderband AS 8*, 147-168. Hamburg: Argument-Verlag.
- Bergsten, C. Fred. 2012. “The Outlook for the Euro Crisis and Implications for the U.S.” In Stacie Vander Pol, ed. *The European Debt Crisis*, 39-58. Pacific Publishing Studio.
- Bibow, Jörg. 2012. “The Euro Debt Crisis and Germany’s Euro Trilemma.” *LEI Working Paper* No.721. Levy Economics Institute.
- Cesaratto, Sergio and Antonella Stirati. 2010. “Germany and the European and Global Crisis.”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39. Issue 4, 56-86.
- Cohen, Benjamin. 2012. “The Future of the Euro: Let’s get real.”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19. No.4, 689-700.
- Deutschmann, Christoph. 1996. “Geld als soziales Konstrukt. Zur Aktualität von Marx und Simmel.” *Leviathan Heft* 3. 23. Jg, 376-393.

- Eichengreen, Barry and Jeffrey Frieden. 1994. "The Political Economy of European Monetary Unification: An Analytical Introduction." In B. Eichengreen and J. Frieden,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European Unification*, 1-24. Boulder: Westview Press.
- Eurostat. 2013. "Eurostat." <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eurostat/home/> (검색일: 2013. 04. 15).
- Hein, Eckhard and Achim Trueger. 2004. "Macroeconomic co-ordination as an economic policy concept - opportunity and obstacles in the EMU." *WSI-Diskussionspapiere*. No.125. Wirtschafts- und Sozialwissenschaftliches Institut (WSI).
- Huffschmid, Jörg. 2005. *Economic Policy for a Social Europe - A Critique of Neoliberalism and Proposals for Alternative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IMF. 2013. *World Economic outlook*. Hopes, Realities, Risks. IMF.
- Jacobi, Lena and Jochen Kluge. 2007. "Before and After the Hartz Reforms: The Performance of Active Labour Market Policy in Germany." *Zeitschrift für Arbeitsmarkt Forschung* 40. Issue 1, 45-64.
- Kenen, Peter. 1969. "The Optimum Currency Area: An Eclectic View." In R. Mundell and A. Swoboda, eds. *Monetary Problems of the International Econom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eynes, John M. 1933. "Monetary Theory of Production." *Festschrift für Arthur Spiethoff*. CWK(Collected Works of Keynes) XIV. London: Macmillan.
- _____. 1973(1936).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CWK VII. London: Macmillan.
- Lapavistas, Costas et al. 2012. *Crisis in the Euro Zone*. London: Verso.
- Manolopoulos, Jason. 2011. *Greece's 'Odious' Debt*. London: Anthem Press.
- Marsh, David. 2009. *The Euro: The Battle for the New Global Currenc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McKinnon, Ronald. 1963. "Optimum Currency Areas." *American Economic Review* 52, 712-725.
- Mitsopoulos, Michael and Theodore Pelagidis. 2011. *Understanding the Crisis in Greece. From Boom to Bust*.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Mundell, Robert. 1961. "A Theory of Optimum Currency Areas." *American Economic Review* 51, 509-517.
- OECD. 2013. "OECD Statistics" <http://stats.oecd.org/> (검색일: 2013. 04. 15).
- Overbeek, Henk. 2012. "Sovereign Debt Crisis in Euroland: Root Causes and Implications

- for European Integration.” *The International Spectator: It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47. No.1, 30-48.
- Overtveldt, Johan van. 2011. *The End of the Euro. The uneasy future of the European Union*. Chicago: B2 Books.
- Özlem, Onaran. 2010. *Fiscal Crisis in Europe or a Crisis of Distribution?*. Working Paper Series 226. Political Economy Research Institut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 Perez-Caldentey, Esteban and Matias Vernengo. 2012. “The Euro Imbalances and Financial Deregulation: A Post-Keyensian Interpretation of the European Debt Crisis.” *LEI Working Paper* No.702. Levy Economics Institute.
- Polanyi, Karl. 2009(1944). 홍기빈 역. 『거대한 전환』. 서울: 도서출판 길.
- Rosenthal, John. 2012. “Germany and the Euro Crisis: Is the powerhouse Really So Pure?” *World Affairs Journal*. (May/June). <http://www.worldaffairsjournal.org/article/germany-and-euro-crisis-powerhouse-really-so-pure> (검색일: 2013. 03. 10.).
- Sinn, Hans-Werner. 2010. *Rescuing Europe*. Special Issue CESifo Forum 11.
- Stockhammer, Engelbert. 2011. “Peripheral Europe’s debt and German wages: the role of wage policy in the Euro area.”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Policy* 7. Nos.1/2/3, 83-96.
- Tsoukalis, Loukas. 2012. “Greece in the Euro Area: Odd Man Out, or Precursor of Things to Come.” In William R. Cline and Wolff B. Guntram, eds. *Resolving the European Debt Crisis*, 19-36. Bruegel: PIIE Press.
- Warner, Jeremy. 2012. “The euro’s demise may be the final chapter of the ERM debacle.” *Telegraph* (September 12). <http://www.telegraph.co.uk/finance/financialcrisis/9538465/The-euro-demise-may-be-the-final-chapter-of-the-ERM-debacle.html> (검색일: 2013. 04. 15).
- Wonders, Grant. 2010. *The Imminent Crisis: Greek Debt and the Collapse of the European Monetary Union*. Cambridge: GW Publishing.
- Wyplosz, Charles. 2010. “European Stabilization Mechanism: Promises, realities and principles.” *VOX* (May 12). <http://www.voxeu.org/article/european-stabilisation-mechanism-promises-realities-and-principles> (검색일: 2013. 04. 15).
- Young, Brigitte and Willi Semmler. 2011. “The European Sovereign Debt Crisis. Is Germany to Blame?” *German Politics & Society* 29. No.1, 1-24.

ABSTRACT

Cause of European Sovereign-debt Crisis and Its Political Character

Young Bin Hahn | Seoul National University

Today, most people insist that the European sovereign-debt crisis was caused by the reckless fiscal policy of PIGS countries. This assertion, however, ignores the structural factors that led PIGS countries to such outcomes. This paper, focusing on the problem of the EMU structure itself, tries to analyze the main reason that led PIGS countries to such behavior. By doing so, the paper aims to show that the main cause of the European crisis was, less likely to the reckless fiscal policy of PIGS countries, the Euro-mercantilism and wage suppression of Germany. Namely, by means of the Euro-mercantilism and wage suppression, it was the 'beggar thy neighbor' policy of Germany that led the periphery of Euro-zone to the sovereign-debt crisis. When we realize this, the current European crisis can no more be seen as the economic crisis. It is rather political crisis of distribution.

Keywords: European sovereign-debt crisis, PIGS, EMU, Germany, unit of labor cost, Euro-mercantilism

